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에 사활 건다

“도민 30년 숙원 꼭 성사”...정부 추천 11월 중순으로 연기
통합한 뒤 전남대 의대 ‘광주·화순 캠퍼스’ 모델로 특성화

전남도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에 당분간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정부 추천 마지막 노선을 2주 이상 연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 사회와 양대학 구성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10월 중순까지 이들 대학의 통합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할 경우 공모 절차를 진행해 추천 대학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모 과정에서 갑자기 대학 통합이라는 난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온 이상 '통합 국립대학 의대'를 정부에 제안해 보다 확실한 명분을 얻으면서 서부권·동부권 간 갈등까지 해소할 수 있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통합 의대로 갈 경우 전남대 의대의 광주·화순 캠퍼스와 같은 형태로 각각 특성화시켜 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25일 순천대, 27일 목포대를 대상으로 한 용역기관 설명회를 각각 진행했으며, 앞으로 2주간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을 위해 양 대학과 본격적인 물밑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차 공청회(9월 25일~27일)도 잠정 연기했으며, 통합 의대 여부가 최종 결정된 뒤 공모 절차를 사실상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의 정부 추천 시기도 10월 말~11월 초에서 11월 중순으로 2주 이상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공모 과정에서 뒤늦게 대학 통합 방안을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 양 대학 내부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 토론회에서 '전남도가 추천하는 대학에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공개 약속한 뒤 전남도는 대학 통합 약속 후 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반발과 논란 속에 무산된 뒤 공모를 추진한 바 있다. 순천대는 25일 용역사 설명회에서 통합 의대는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전 단계인 '연합대학·의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는 대학 통합 전제 의대 설립에 찬성하면서도 일정을 지체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도는 용역기관 설명회에서 수렴한 양 대학의 의견을 분석한 뒤 각계 지역인사, 대학 구성원 등을 접촉하면서 통합 의대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 1월 정부가 공동 의대 제안을 반대한 것은 당시 대학 통합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여러 경로를 타진해 보니, 확실히 통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의대가 가장 상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본 뒤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 정부가 '1도1국립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통합 의대로 신청할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2026년 의대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 최종 마지막 노선을 11월까지로 보고 그 전에 도내에서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모든 논의를 후회 없이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무등산 중심사에 불...하마터면 잿더미 될 뻔 29일 광주시 동구 윤림동 중심사 내 공양간·행원당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오늘부터 '정부24'에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所知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인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이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과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되며, 바로 발급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필분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순배 위자료, 서울이 광주에 최대 4배 ▶6면
인생 2막 신중년 - 박원·황선미씨 부부 ▶22면

내일 국군의날 신문 쉽다

The 14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Civic Space and Human Rights Cities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2024. 10. 10.(목) - 10. 11.(금)
김대중컨벤션센터

